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통일원

차 례

제1편 통일문제의 이해 ····· 7

Ⅰ. 머리말 / 9

Ⅱ. 통일논의의 기본전제 / 10
1. 통일의 당위성
2.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Ⅲ. 우리의 통일노력 / 17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대북정책

Ⅳ.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 21

제2편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 25

Ⅰ. 머리말 / 27

Ⅱ. 남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 28
1.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2. 남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Ⅲ. 남북한 여성의 통일에 대한 인식 / 55

1. 북한 여성의 통일에 대한 인식
2. 남한 여성의 통일에 대한 인식

Ⅳ.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 67

1. 가정에서의 통일교육 담당자
2. 사회활동을 통한 통일운동
3. 사회·문화적 교류 및 협력
4.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Ⅴ. 맺은말 :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여성상을 지향하며 / 78

참고문헌 / 85

제 1 편

통일문제의 이해

박 영 호 (민족통일연구원 연구위원)

Ⅰ. 머리말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고 인간 생활의 자유화, 복지화, 개방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동북아 지역에서도 탈냉전의 지역 질서가 서서히 등장하고 있다.

한편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망함으로써 한 시대의 종언을 맞고 있다. 북한은 경제난의 심화와 국제적 고립, 그리고 무엇보다도 체제 경직성으로 인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가운데 체제 유지를 최대의 목표로 삼게 되었다.

남한에서는 문민정부가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과감한 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세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라 우리 민족도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사실 오늘날의 역사적 흐름은 우리 민족에게 분단 이후 그 어느때 보다 통일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대적 과제는 민족적 소망인 통일문제를 다시 한번 냉정히 생각하고,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가다듬은 후, 이를 차분하게 실천하는 일이라고 하겠다.

Ⅱ. 통일논의의 기본 전제

1. 통일의 당위성

우리에게 통일이란 명제는 더이상 하나의 이상이나 관념적 차원에 머물러 있지는 않다. 그것은 동서독이나 남북예멘이 통일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통일이 현실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통일을 현실적 문제로 보아야 할 몇가지 이유를 들면[1]

첫째, 남한 사회의 발전이다. 남한사회의 전반적인 발전으로 말미암아 남한사회 내의 계급혁명과 공산화를 기도하는 북한의 목표는 그 실현 가능성이 거의 소멸된 상태이며, 우리 국민들의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은 우려로부터 자신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 모두가 노력한 결과이며, 나아가 민족역량이 확대되고 있는 증거로서 통일을 추진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둘째, 국제 환경의 변화이다. 남한의 구소련(러시아)및 중국과의 수교와 북한의 대미·일 관계개선 추진으로 특징지워지는 동북아 환경 변화에 따라 한반도 분단 구조는 과거 어느 때 보다도 남북한이 더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과제

1) 마영호·김도태, "통일환경의 변화와 「8·15 경축사」의 상황적 배경,"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4~17.

가 되었다.

셋째, 북한 사회의 변화가능성 증대이다. 북한은 동기유발 요인을 갖고 있지 못한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고수해 옴으로써 경제적 피폐현상이 나타나고 주민생활은 더욱 악화되었다. 근래에는 통제된 사회에서는 보기 힘든 주민의 사회일탈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부정과 부조리가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2]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더이상 남한 공산화 추진 전략에만 매진할 수는 없으며, 북한 내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대외 개방과 사회 개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처하게 되었다.

넷째, 북한 체제의 개방·개혁의 필요성 증대와 함께 김일성의 사망에 따른 지도자 교체도 통일을 촉진하는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일성의 사망으로 민족 분단의 책임을 더이상 당사자에게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북한 관계는 과거의 책임에 초점을 맞추는 증오와 대립의 관계로부터 벗어나 협력을 위한 선의의 경쟁 관계로 진입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 여건이 좋아지고 있다고 하여 통일이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에 바탕을 두지 않는 통일주

---

2)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체제의 실상과 변화전망」(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1), pp.417~432 및 김성철, 「북한 관료부패 연구」(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장은 공허한 담론으로 끝나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열거할 수 있다.[3]

첫째, 남북한 주민들은 「하나의 민족」이다. 남북한의 7천만 동포는 같은 혈통에 같은 말과 글을 쓰며, 고유한 전통과 문화를 일구며 같은 역사를 살아온 하나의 민족이다.

그러나 지난 반세기 동안의 분단으로 인한 남북간 이질화의 심화는 남북한 주민을 마치 다른 민족인 것처럼 만들고 있다.

따라서 민족간의 경쟁을 뛰어 넘어 남북한 주민이 다시 하나의 민족으로 더불어 살기 위하여 통일은 필요한 것이다.

둘째, 통일은 남북한 민족 성원 모두에게 「질 높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다. 통일은 바로 남한이나 북한 어느 일방만의 번영과 복지,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이익과 번영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민족이 분단된 상태로 대립하고 서로 불안을 조성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질 높은 삶」을 살 수 없다.

셋째, 통일은 민족의 발전과 도약의 발판이다. 만일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단이 영구화된다면 민족의 역량은 분산되어 주변국들과의 경쟁에서 민족의 이익을 지키기가 어렵게 되고 민족의 웅비를 기약할 수 없다. 특히 미국, 일본,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 세계 최강대국들과 접해 있는 한반도에서 대립하고 있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재결합하지 못할

3) 성용길, "통일의 기본철학과 원칙", 민족통일연구원 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서울 :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33~37.

때 우리 민족의 재도약은커녕 조선말엽처럼 열강들의 각축속에 빠질 수도 있다.

넷째, 한반도 통일은 동북아 평화는 물론 세계평화에 기여한다. 한반도는 대륙과 대양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서 지정학적 의미가 크다. 따라서 한반도는 갈등과 분쟁의 진원지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통일은 좁게는 동북아에, 그리고 넓게는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는 길인 것이다. 통일은 바로 우리 민족이 세계화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첩경이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은 통일의 당위성에 비추어 볼때 한반도 통일은 우리 민족의 시대적 소명이며 실천해야 할 과제임에 분명하다. 우리에게는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주어지고 있으며,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며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부정적 상황의 발생이나 전개가 이루어 지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시점이다.

2. 통일의 기본 철학과 원칙

(1) 기본 철학

통일은 단순히 분단되었던 국토, 정부 그리고 민족이 재

결합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한반도 통일은 단순히 한반도에 하나의 헌법, 하나의 정부를 가지는 단일 주권국가의 건설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민족 전체의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진정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건설됨을 말하는 것이다.

다시말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개개인의 자유와 기본적 인권의 보장을 바탕으로 민족 구성원 모두가 인간다운 질 높은 삶을 영위하는 가운데 자아를 실현하며 민족의 번영이 약속되도록 하는 통일이다. 또한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위시한 제반 정치적 기본인권을 광범위하게 보장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우리는 통일을 원하고 있다. 즉 바람직한 통일국가의 모습은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보장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토론을 거쳐 민주적 절차와 방법으로 복지사회를 건설하는 「민족공동체」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통일은 다원주의를 신봉하는 자유민주주의에 근거하여 접근하여야 하며, 자유민주주의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반해 북한의 사회주의는 모든 것을 획일화, 집단화하여 하나의 이데올로기로 사상적 통일을 하고, 하나의 정당으로 일원화된 정치활동을 펴며, 계획경제를 통해 개인의 경제적 이익마저 일방적으로 통제되는 제도이다. 북한의 주체사상에서 인간이 역사의 주체가 된다고 하는 것은 통치를 위한 명분 때문이지, 실제로 일반 국민 다수가 역사의 주인 행세를 할 수 있기 때문은 아니다.

사실 인류 역사 발전의 맥락이나 오늘의 세계질서 재편과

정을 볼때 남한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북한이 지향하는 사회주의 중에서 어떠한 체제와 이념이 보편적인 가치로서 정당화되며 인간의 본성에 가장 알맞는 것인가는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정도로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인류가 오래도록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찾아 낸 가치 있는 삶의 공통 분모인 것이다.

요컨대 우리는 더이상 이념 경쟁에 매몰되기 보다는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를 통일의 기본 철학으로 삼고, 지금부터라도 남북한 7천만 동포가 함께 살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달성하기 위해 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2) 통일 원칙

통일원칙은 통일을 실현해 나가는 과정에서나 통일국가의 수립 절차를 협의하는 데 있어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우리 민족의 입장과 자세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통일원칙과 통일운동은 통일한국의 기본이념에 부합되어야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달성해야 할 통일조국의 미래상 실현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우리정부는 1970년대 이후 자주·평화·민주를 3대 통일원칙으로 계속 견지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분단을 막지 못했지만 통일은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전쟁이나 어느 일방에 의

한 상대방의 전복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드시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민족의 운명이 걸린 통일에 이르는 길도 분명히 민주적인 원칙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 우선 자주의 원칙이다.

한반도 통일문제를 남북한이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것은 주변 강대국들의 보호나 간섭을 받지 않고 남북한 스스로 민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통일을 이룬다는 것이다. 즉, 우리 민족의 뜻에 따라 우리 민족의 역량에 의해 자주적으로 통일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자주성의 강조가 국제사회와의 고립적인 배타적 자주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주적 입장이란 다른 국가들과의 상호 의존 및 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 한반도 통일이 남북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말하는 것이다.

• 다음으로 평화의 원칙이다.

통일원칙에서 평화란 바로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나 상대방을 전복함으로써 이루어져서는 안되고 평화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우리는 6·25와 같은 동족상잔의 무력전쟁이 되풀이되면 우리 민족이 영원히 파멸될 것임을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은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무력이나 힘을 사용하여 강제로 달성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평화통일 원칙은 다시는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원칙론적인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나아가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해 전쟁이나 혁명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포기하도록 하는 적극적인 평화 추구의 노력이어야 한다.

• 마지막으로 민주의 원칙이다.

통일된 조국은 민족 구성원 모두의 자유와 권리를 바탕으로 번영이 보장되는 민주국가여야 하며, 또 통일에 이르는 과정과 절차 또한 민주원칙에 입각하여 이루어지는 민주적 통합이어야 한다.

민주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다.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는 방법으로 통일정부의 형태, 정치와 경제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통일원칙으로 민주적 방식을 제시하는 것은 곧 자유민주주의 체제로의 통일을 뜻하는 것이다. 사실 자유민주주의는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반드시 수호되어야 하며, 통일은 계급이나 이념보다도 인간 중심의 자유민주주의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민주적 원칙을 통해서 만이 남북한 7천만 한민족의 대단결을 달성할 수 있다.

Ⅲ. 우리의 통일 노력

1.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980년대 이후 우리정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단순한 선

언 차원을 넘어 종합적인 실천방안으로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국내외 상황의 변화에 따라 통일방안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특히 우리 사회의 발전과 탈냉전의 국제적 추세를 반영하는 통일노력이 요구되었다.

김영삼 정부는 출범이후 여러 계기를 통해 밝힌 통일정책에 대한 구상을 종합적으로 체계화하여 광복 49주년 기념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재천명하였다. 또한 정부는 통일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영토적·제도적·정치적 측면에서 통일에 접근하는 자세로부터 적대감과 대립이 장기화됨으로써 훼손된 민족공동체의 회복과 발전의 바탕 위에서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통일접근의 방식으로 그 주안점을 변화시켜 왔다. 즉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완성'의 3단계가 그것이다.

첫째, 화해·협력 단계는 남과 북이 냉전시대의 산물(産物)인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쌓아가는 가운데 화해와 협력의 관계로 발전시켜 나아가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존중하고, 서로를 파괴·전복하거나 군사적으로 공격하지 않는다는 불가침 약속을 지켜가면서 경제·사회적 교류와 협력을 다각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둘째, 남북연합 단계는 남북이 화해·협력 단계에서 구축된 신뢰를 토대로 통합과정을 관리하는 단계로서, 남북간에 평화를 제도화하고 민족의 동질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남과 북은 이 단계에서 민족공동 생활권을 형성하면서 사회·문화·경제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게 될 것이다. 또 남북연합에 공동기구를 두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를 남북간의 합의에 의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되며, 이들 공동기구에서 국가통합 즉, 정치와 제도의 통합을 위한 여러 방법을 논의하게 될 것이다.

예컨대 남북정상회의나 각료회의를 열어 동질화 작업을 위한 구체적인 과제를 논의하거나, 남북의 의회대표들이 통일헌법안을 마련하는 일들이 그것이다.

셋째, 1민족 1국가의 통일국가를 완성하는 단계이다. 남북연합 단계에서 합의·제정한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국회를 구성하고 통일정부를 수립하여 하나의 민족국가를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통일국가 수립이 곧 통일의 완결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같은 민족이 하나의 국가를 이루었다고 해도 분단시대의 잔재로 인해 여러가지 후유증이 발생할 것이므로 통일정부 수립 후에도 온 겨레가 단합된 힘으로 명실상부한 민족공동체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2. 대북 정책

국민적 지지에 기초한 문민정부의 이점을 살려 전향적인 대북 정책을 구사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북한이 1993년 3월

12일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탈퇴를 선언함으로써 타격을 받게 되었으나,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과 미국 간의 합의로 북한 핵문제의 포괄적 해결의 틀이 마련됨으로써 미국과의 협조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려는 김영삼 정부의 노력은 일단의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할 것임을 천명한 바 있으며 궁극적으로 북한 핵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일관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편, 김일성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이 무산되고 북한의 권력승계가 공식적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의미있는 남북대화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정상회담 개최합의가 아직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북·미간 제네바 합의 이후 북한에 대해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추진할 것을 천명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진전을 위한 열린 자세를 보여주고 있다.

정부는 북한도 이제 김일성 사망을 계기로 냉전의 껍질을 깨고 본격적인 변화를 모색해 나가야 하며,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가 자유·복지·개방화를 지향하는 세계사의 흐름에 적극 동참해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아울러 북한의 새로운 지도부에 대해 평화와 협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실용적인 준비태세를 갖춤으로써, 남북한이 협력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북한의

새로운 정권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함께 대북 정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대북 인식은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합의한 대로 남북관계는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전문)이며,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제1조)는 입장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북한에 대한 흡수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북한도 이제 이념 대결의 틀 속에서 하루속히 벗어날 것을 촉구하였다.

Ⅳ. 통일에 대비하는 우리의 자세

우리는 남북간 분단 상황을 방치함으로써 나타나게 될 결과가 한반도 분단의 영구 고착화 가능성의 증대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특히 북한 경제의 부진과 북한 주민의 빈곤현상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 통일의 과제는 남한 사회가 감내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증가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남북한 통일은 민족의 자주적 역량에 의해 이루어지기 보다는 주변국의 개입이 더욱 필요하게 되는 국제문제로 비화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나 한반도에서 발생하고 있는 긍정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고려할 경우, 현 시점은 우리 민족에게 흔치 않은 만

족발전의 기회와 함께 우리가 적극적인 문제 해결의 자세를 가지고 통일이라는 민족의 과제를 수행할 경우 바람직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탈이념적 국제질서 속에서 남북한 관계가 이념대립을 지속함으로써 더이상 국력을 소모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남북한이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통해 공존과 공영의 길에 들어서는 것이 유일한 선택의 대안이 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우리 민족이 아시아·태평양 시대를 주도하고 새로운 문명의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민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은 두 개로 나누어진 민족 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키는 작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일은 바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고 운영함으로써 그동안 빈칸으로 남았던 민족발전사의 공백 기간을 메우는 작업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작업의 주된 임무는 북한 주민보다는 남한 국민의 손안에 있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는 무엇보다도 통일 과정이 피와 땀을 수반하는 일임을 인식해야 한다. 다시말해 통일 과정에서 우리는 개인적 차원에서나 국가적 차원에서 많은 고통과 희생,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는 것을 알고,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를 해야하는 것이다.

통일에 따르는 부담이나 고통 때문에 우리 민족에게 주어지는 통일의 기회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될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바로 우리의 생활을 북한 주민들과 공유하는 것이다.

결국 남북한간 통일은 정치·군사적 대결에 따른 어느 일방의 승리의 결과가 아니라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는 우리 민족 전체가 상호 이해와 협력을 통해 달성해야 하는 것이다.

우리 민족이 21세기에 세계사를 주도하는 일원으로 등장하기 위해서는 한반도에 나타나고 있는 상황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현재의 시대적 상황을 열강이 각축했던 구한말의 역사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시점이 중요한 통일과정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역사적 대세 앞에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할 길은 자명하다.

이제 우리는 국내적으로는 국민화합을 바탕으로 국력을 신장하여 「통일역량」을 더욱 기르고, 국제적으로는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증대와 외교적 노력으로 국제적인 「통일환경」을 우리들에게 유리하도록 조성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한다.

제 2 편

통일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

이 은 죽 (서울대 교수)

Ⅰ. 머리말

오늘날 한반도에서 통일에 대한 논의는 탁상공론이 아닌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북한에서는 신과 다름없었던 김일성이 1994년 7월에 사망하게 되고, 북한 내부의 누적된 경제침체에 따른 주민들의 고조된 불만으로 북한은 개방의 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해 있다. 오늘날 세계사의 흐름과 한반도에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 민족이 통일의 주체로서 통일에 대비한 준비를 얼마나 해왔는가를 돌이켜 보게 한다.

통일의 주체가 우리 민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우리 민족 구성원들은 그동안 얼마나 많은 통일에 대한 준비와 그에 따른 노력을 경주해 왔는가?

민족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은 기준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으나 여성 또한 빼놓을 수 없는 민족 구성원의 일원들임에 틀림없다. 특히 민족구성원의 절반이 여성이라는 숫자적 비중도 크지만 반만년의 민족사를 면면히 이어오게 한 내면적 역할은 여성의 몫이었다. 한민족의 여성은 특유의 강인한 정신력으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힘의 원천이 되었다. 그러나 우리 민족의 여성의 역할은 항상 남성역할의 그늘 속에 가려져 왔고 오히려 근대에 이르기까지 전통봉건사상은 여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접어둔 채 여성의 역할 역시 위축시켰다.

특히 해방 이후의 분단 과정에서 여성들의 개인적 사회적 활동을 돌이켜 볼 때, 여성의 역할 수행에 있어서 문제점이 남북한 양쪽 모두 상당히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경우 남녀평등을 실현한다는 명목하에 여성의 노동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가정의 혁명화로 인해 여성 고유의 생활 영역마저 침범당하게 된 점, 남한의 경우 풍요로운 물질생활 속에서 안위하거나 반대로 얽매임으로써 사회 참여에 있어 수동적 부차적 지위와 역할에 머무르게 된 점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남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의 현상(現狀)에서 통일시대의 여성으로서 자유·평등의 실현을 통한 삶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는 한계를 지닐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남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성격이 규명되어야하며, 이로부터 통일에 대한 인식을 재점검하고 향후 통일한국을 준비하는 바람직한 여성상을 정립해야 한다.

Ⅱ. 남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1. 북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1) 사회주의 혁명과 여성의 지위

북한사회는 이념적 토대를 마르크스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입각한 계급없는 사회의 건설에 두고 있다. 북한 당국자들은 정권장악 즉시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을 서둘렀다. 즉 사유재산 제도를 포함한 기존의 사회제도 철폐와 사회주의 사회건설을 통해 계급없는 사회를 추구함으로써 여성의 계급적 해방도 이룰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① 이념적 선언에 나타난 여성상

해방을 전후한 이 시대의 북한여성관의 특징은 혁명 투사적 인간형으로, 설정하고 있는데 당시의 '여성해방가' 의 구절을 알아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다.

"1. 권리를 박탈한 자본 사회에···
5. 녀성들 우리동무 다 일어나라
부르죠아제도를 없애 버리고
동등한 권리 위해 총들을 들자."

여성의 불평등을 노래하면서 여성의 섬세함은 강인함으로 대치되었고, 수동성은 적극성으로 대치되어, 열렬한 혁명적 투사의 전형을 그리고 있다. 전통적 여성상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여성 특유의 유연함이나 수용성은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식은 1949년 김정애의 토론에서도 반영되고 있다.

"북반부 녀성들은 봉건적 노예 관계를 깨끗이 청산하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각 방면에서 남자와 동등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였읍니다."

여기에서 봉건적 노예 관계의 청산이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첫째, 사회적으로 지주나 자본가의 직접적인 고용 관계를 벗어났음을 의미하고, 둘째, 집안에서 전통적인 남편과 아내의 관계 또는 시어른과 며느리의 관계에서 여성의 역할 규정이 변화하였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통적이고 통상적인 여성상에서 강인하고 혁명적인 여성상으로의 변화와 더불어 강조된 사회적 남녀평등 이념은 1961년경부터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한다.

1962년 11월 최고인민회의에서 김옥순은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오늘 우리 녀성들은 알뜰한 주부이며 자애로운 어머니일 뿐만 아니라 당에 의하여 교양된 훌륭한 천리마 기수로서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초소에서 자신의 행복과 나라의 번영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여성은 이제 혁명적인 사회적 활동의 투사뿐만 아니라 알뜰한 가정주부, 자애로운 어머니의 역할이 추가되고 있다. 요컨대 어머니이자 천리마 기수로서 가정과 사회에서의 충실한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1970년 이후 북한은 김일성의 어머니인 강반석과, 김정일

의 어머니인 김정숙을 가장 이상적인 여성상으로 제시하면서 이들을 따라 배울 것을 강조하였다. 강반석은 조선 여성의 전형으로서 제시되며, 김정숙은 친위 전사로서 북한여성의 영원한 귀감이라는 것이다.

'강반석 여사를 따라 배우자'에서 강반석을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 "녀사께서는… 직접 혁명활동을 전개하신 혁명가로서의 투쟁을 가장 큰 락으로 삼으셨고 가장 귀중한 영예로 여기시었다. 강반석녀사는 시부모 앞에서 말대답을 하거나 변명하시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녀사는 동서와 시누이들이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가정의 주부라는 립장에서 언제나 "제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고치겠습니다"라고 하시였지 해명을 한다거나 더욱이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일이 한번도 없었다."

1960~70년대의 모범적 여성상이 강반석이었다면, 80년대는 김정숙이다. 김정숙은 김일성을 위해서는 목숨까지 바치려 든 충직한 '친위전사'인 동시에 김정일에 대해서는 '충성의 씨앗을 심어 준' 모범적 어머니로 묘사된다.

> "존경하는 녀사께서는… 나무를 패시여도 위대한 수령님께서 휴식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구석진 곳에 가시여 도끼질 소리가 들리지 않도록하시였다…. 녀사의 일거일동은 그대로 아드님께 거울이 되고 모범이 되였다."

여기에서 제시된 모범적 여성상은 남편이 쉴 때에도 아내의 노동을 정당화하는 전통적인 수직적 부부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으며, 김정일을 효자로 기른 모범적인 어머니로서 묘사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북한의 여성정체 및 여성관은 사회주의 건설 초기의 혁명적 사고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최근의 그들 노랫말 〈녀성은 꽃이라네〉에 잘 나타나 있다.

〈녀성은 꽃이라네〉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한 가정을 알뜰살뜰 돌보는 꽃이라네
정다운 안해여 누나여 그대들 없다면
생활의 한자리가 비어있으리
녀성은 꽃이라네 생활의 꽃이라네

이 노래는 지나칠 만큼 여성다움이 강조되고 있다. 이 노래에서 여성은 고유한 정체성을 지닌 존재이기보다는 생활의 꽃, 가정의 꽃으로서 아내와 누나 등 가정내에서의 전통적 역할이 강조될 뿐, 인간으로서의 어떤 고유한 역할이 부여되고 있지 않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에서 제시되는 여성상은 사회주의 국가 건설 과정에 따라 변화해 왔다. 즉 여성의 사회 참여를 통한 평등정체으로부터 권위주의적 가부장체제를 수용하면서도 노동력의 사회적 제공의 역할을 강조했다. 또

한편으로는 계급없이 평등한 사회주의 지향에서 부자세습체제로의 전환을 위하여 전통적인 유교적 성향의 여성의 역할을 필요로 하였던 것이다.

② 법률적 규정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

북한 사회는 건립 초기부터 스탈린 헌법을 모방하여 법제를 정비하였다. 이것은 인민민주주의 헌법에 기초한 것으로, 1972년 발표된 '사회주의 헌법' 발표 시기까지 적용되었다. 북한은 사회주의 이념에 기초하여 남녀간의 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법제를 마련하였는데, 그 실현 과정에서는 현실과 많은 괴리를 보여주고 있다.

1946년 7월 30일자로 발표된 "북조선의 남녀평등권에 대한 법령"은 남녀평등권, 선거권, 동일노동 동일임금, 자유이혼소송권, 처첩금지, 공사창 금지, 재산 및 토지상속권, 이혼시 재산분할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법률적 규정에 나타난 여성의 지위는 사회주의적 평등사상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같은 해 발표된 '북조선 노동자 및 사무원에 대한 로동법령'에서 여성에 관한 조문에서는 동일노동 동일임금, 산전산후 휴가 및 경노동, 수유시간 보장, 태모와 유모의 시간외 노동이나 야간 노동 금지 등을 법제화하고 있다.

1972년 헌법은 '사회주의 헌법'으로서 사회주의를 중요한 구성원리로 하고 있다. 이 헌법은 구헌법과 그 체계가 완전히 다르다.

여성에 대해서는 구헌법에서처럼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지

는 않지만 헌법 제 62조와 제 63조에서 포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제62조 녀자는 남자와 똑같은 사회적 지위와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산전산후 휴가의 보장,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위한 로동시간의 단축, 산원, 탁아소 및 유치원망의 확장, 그 밖의 시책을 통하여 어머니들과 어린이들을 특별히 보장한다. 국가는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며 그들이 사회에 진출할 온갖 조건을 보장한다.
>
> 제63조 결혼 및 가정은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세포인 가정을 공고히 하는데 깊은 배려를 돌린다.

1972년의 헌법에서는 1946년 구헌법과 비교하여 북한 여성의 가사로부터 해방에 의한 사회 참여라는 구체적인 방법 내지 내용이 언급되고 있으나 1946년 '남녀 평등권에 관한 법령'처럼 남녀평등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지 않은 것은 북한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다. 이는 남녀평등을 통한 여성 노동력의 사회적 동원으로부터 부자세습 체제로의 사회 변화가 또 다른 모습의 여성의 역할을 요청하였기 때문이다.

북한은 1992년 4월 9일 새롭게 헌법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주로 남한의 흡수통일 논의에 대한 자극으로 인하여 북한 지역의 사회주의화를 공고히하는 법령의 정비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이 시기에 북한의 여성의 권리에 대한 법제화는 1972년 헌법에 비하여 특별한 내용의 변화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즉 1972년 헌법의 제 62조와 제 63조가 1992년 헌법의 제 76조와 제 77조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것은 북한 사회가 여성의 권리에 대하여 변화된 모습을 보이지 않고 단지 변화된 주변 상황에 적응할 수 있는 법률의 개정에만 관심을 기울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김정일 세습 체제의 공고화 작업에는 여성의 지위나 역할의 변화가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비록 법률적으로 여성의 지위나 역할에 대한 고려가 이루어졌을지라도, 누적적인 경제적 침체 상태에서 현실적인 여성의 삶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

⑵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① 가정에서의 여성의 역할

북한은 소련의 경험을 거울삼아 가족의 해체나 친족 집단의 파괴를 의도적으로 추진한 흔적은 없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남녀평등, 여성의 사회 참여, 노력동원 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가부장적인 전통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들이 표방하는 남녀평등의 실현 정도는 소설에 나오는 가정 내의 부부 관계에서 유추해 볼 수 있다.

최상순의 소설 '나의 교단'에 등장하는 여선생 윤애의 남편은 가사 일에 익숙하지 않은 아내를 위하여 출근 준비를 시켜 주는 것은 물론 육아를 도와주고, 심지어 수업 재료로

쓰일 '적관물'까지도 밤새워 마련해 주는 자상한 남편으로 묘사된다. 여기서 북한 사회의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사랑을 매개로 할 때, 아내를 배려해 주고 스스로 가사 분담을 자청함으로써 가정 내의 평등한 관계는 어느 정도 실현됨을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소설 류벽의 '조국의 품속에서'는 북송된 동포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서는 일본에서 익숙한 관행과 북한에서 새로운 풍습 사이에 생기는 긴장을 보여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남편이 아내에게 자기를 봉양하고 관심을 가져 주기를 기대하고 명령에 따르기를 원하는데, 아내는 직장일에 바쁘고 "옛날처럼 봉건적으로 억눌려 살 줄 아느냐?"는 항변과 함께, 오히려 남편에게 여러 가지 협조를 부탁한다. 그러자 남편이 견디다 못해 밥상을 뒤엎는 일이 벌어지며, 부부간에 냉전이 계속된다. 이 남편은 딸에게서 '폭군적 가부장'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여성이 가정내의 남편과의 상호관계에서 전통적인 역할을 벗어나는 것이 어려워진다고 보여지며, 실제로 북한 사회에서 가사는 여성이 전담하고 있으며, 대체로 남편은 아내에게 반말을 사용하고, 또 자질구레한 일에 손을 대는 것은 남자의 수치로 인식하고 있다.

가정의 역할은 무엇보다도 자녀의 양육과 초기 사회화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 속담에도 '어린 아이는 기를 탓이다', '세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라는 등 초기의 가정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북한의 경우 양육과 교육의

첫 출발점은 가정이 아니라 탁아소이다. 1976년부터 시작된 '젖먹이의 집단화' 정책으로 유아기부터 탁아소에서 양육되고 교육되는데, 이것은 남북한 이질화를 심화시키는 중요 요인이다. 북한은 아이의 어릴 때 습관의 중요성과 초기 교육의 효과를 인지하고, 이른바 '집단주의 원리'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집단주의 원리'에 따른 탁아소의 교육 실시로 북한 여성은 한편으로는 자녀 양육의 부담으로부터 해방되었다는 해석도 가능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여성의 노동 부담이 심화되고 그로 인하여 자녀와 함께 생활할 수 있는 행복한 삶의 기회마저 빼앗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② 정치 경제 생활에서의 여성

북한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통치기구속에서 비교적 고위직에 장기간 머물렀던 여성의 숫자와 그 지위, 실제적 영향력 등으로 판단하는 것이 비교적 타당성을 지닐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통치 구조를 고려하면, 여성의 정치적인 지위는 표면적으로는 각급 기관의 간부들 속에서 여성의 비율로 측정될 수 있겠지만, 실제적으로는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중앙인민위원회', '정무원'에서의 여성의 비율이나 역할로 측정 가능하다.

'최고인민위원회'에서의 여성의 비율은 20.1%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역대 상설위원이나 의장단 성원으로 활약한 여성은 총 7명이다. 이들 7명의 명단을 보면, 초대 여맹 위원

장인 박정애, 현 인민군 총참모장인 최광의 부인으로 항일 유격대 위원인 김옥순, 김득란, 이화여대 출신으로 해외에서 유학한 인텔리 출신으로 5개국어에 능통한 허정숙, 김일성의 처 김성애, 몽양 여운형의 딸로 대남 사업에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여연구, 평양교원대 학장을 역임한 학자 출신인 남순희 등이다.

'최고 주권 기관인 행정적 집행기관'으로 규정된 정무원의 진출을 보면, 이제까지 여성 장관은 통틀어서 6명에 불과하다. 이것은 이제까지 북한의 각료 260명을 기준으로 할 때 매우 적은 숫자라고 할 수 있다.

이 밖에 노동당의 핵심인 당중앙위에 진출하여 활동하는 여성의 수도 별로 많지 않다. 1990년말 당중앙위에 진출한 여성은 이선실과 김복신 2명뿐이었다. 이선실과 김복신은 당 조직업무와 경공업 분야의 전문가로서 발탁된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 활동하였던 김정숙, 김성애, 김경희는 김일성의 가족이다. 허정숙, 왕옥환은 남편이 핵심적 당간부이고, 여맹 경력이 있으며, 이화선은 열성당원출신이다.

대체로 북한 여성이 정치 요직에 진출하는 통로는 첫째 김일성을 비롯하여 북한 핵심 권력층의 혈족이나 친족 등의 후광으로 고위직에 오르는 경우이고, 둘째 자신의 노력을 통해 능력을 인정받아 엘리트가 되는 방법이다. 물론 두 가지의 충원 배경을 동시에 갖추고 있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 여성의 정치적 지위는 20.1%라는 최고인민위원회 대의원의 비율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비교적

높은 편으로 북한 당국이 제도적으로 여성에게 일정 비율의 의석을 배분하여 온 노력은 인정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일반 여성들은 정책 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단지 당의 결정에 따라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치 외에 경제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살펴보는 데는 법률적 규정과 그 실제간의 차이를 보는 것이 중요하다. 북한의 모든 명문화된 법령에는 노동에서의 남녀평등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이 규정되어 있다. 이런 규정들은 사회적 통념에 의하여 차별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시행된다. 따라서 북한 여성의 노동조건은 법령상 세계 여타의 복지국가에 비하여 뒤떨어지지는 않는다.

1970년대초 북한 여성 인력의 진출은 경공업 부문(70%), 인민학교 교사(80%), 농업 부문(60%)에 집중되어 있었고 고등중학교 교사(35%), 임업 부문(30%), 광산과 탄광의 지하노동(20%), 중공업 부문(15%), 대학 교수(15%)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1988년 북경방송에 의하면 북한에는 131만여명의 전문가, 학자, 기술자 등이 있는데 이 중에서 여성은 46만 3천여명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러한 경제활동인구의 분포는 북한에서의 전문 기술직이 남한에서와 같은 직종인가의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고급 인력이라는 점에서 볼 때,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그만큼 향상되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제 생활에서의 여성 인력 진출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규정뒤에는 온갖 차별의 가능성이 내포되어 있다. 그 차별의 가능성은 다

음과 같다.

첫째, 헌법에 규정된 노동의 권리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는다. 북한에서는 고등학교 졸업과 함께 학교장의 추천, 당의 추천과 검토, 경제 계획, 본인의 희망에 따라 직장 또는 대학에 집단적으로 배치된다. 출신 성분이 나쁘고, 뇌물을 쓸 능력도 없으며, 당정 간부를 동원할 수 없는 여성은 원하는 직업에 배치되기가 힘들고 대학에 가기도 어렵다.

둘째, 사회주의 헌법과 사회주의 노동법에 규정된 사회주의 분배 원칙과 동일노동, 동일임금은 직종간의 차별, 즉 차별노동, 차별임금의 형식으로 여성에게 적용된다. 북한에서의 직업 배치는 일차적으로 남녀 모두 출신 성분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데, 여성에게 특별히 제기되는 차별은 경공업 분야나 농촌의 비숙련 노동자로의 집중 배치이다. 이뿐만 아니라 승진의 기회에서도 차별이 나타난다. 예컨대 여성 노동자가 80%를 차지하는 섬유산업이나 농촌협동농장 등에서도 지배인, 관리위원장의 비율은 여성노동자의 비율처럼 80%를 차지하지 못한다.

셋째, 사회주의 노동법의 '가내작업반'의 설치는 주부의 노동력을 보다 값싸게 동원하는 경로가 되고 있다. '가내작업반'은 자녀양육, 대가족 부양 등의 이유로 직장생활이 곤란한 여성을 위한 것으로, 정규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연금혜택은 없다.

넷째, 사회주의 노동법의 유해노동금지는 자발적 중노동

을 금지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여성의 20%정도가 지원노동 형식으로 지하노동, 탄광노동, 저인망어업 등의 중노동의 직종에 종사하고 있다.

다섯째, 150일의 산전산후 휴가는 대부분 '혁명적 열정'의 명목으로 반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북한이 자랑할 만한 여성 노동의 모범적 조건은 탁아소와 유치원 시설이다. 1991년 현재 6만여개가 설치되어 166만 아동이 수용되어 있으며, 각 직장 내에 설치되어 수유가 가능하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볼 때 경제생활에서의 여성은 과거에 비해 그 지위가 향상되었지만 법률적 규정과는 달리 실제에 있어서는 그리 평등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다만 탁아소와 유아원의 설치로 여성 노동조건의 향상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③ 북한 여성의 문화 생활

한국의 문화 양상은 주로 순수 문화예술과 대중문화로 양분되는 경향이 있는데, 북한의 경우는 순수문화와 대중문화의 구별이 없다. 이는 남한의 문화가 표현의 자유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데 반해 북한의 문화 생활은 당적 지도를 통한 대중교육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문화 예술 분야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북한의 여성 인민배우를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첫째, 북한의 공연예술

중 대표적인 작품의 주인공은 대부분 여성으로,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형상화하는 매개적 기능으로서 여성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북한문예활동에서 현재 활동하고 있는 여성 인사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 가장 인기 있는 배우는 오미란과 홍영희로 1990년 뉴욕의 남북 영화제에서 우리에게 얼굴이 알려진 여배우들이다. 이중에 홍영희는 현재 1원짜리 북한 지폐의 모델이 될 만큼 비중 있는 배우이며, 이들 외에도 다수의 여배우가 있다. 셋째, 공연예술에서 여성의 비중이 큰 데 비하여 문화예술계에서의 여성의 지위는 취약하다. 실례로 조선음악가동맹 산하 각 분과위원회 위원장에 여성이 한 명도 없고, 평양음악대학의 주요 직책자 명단에도 여성을 찾아보기 힘들다.

문예작품의 대체적인 경향은 여성을 통하여 계급 의식의 고양과 사상 교양을 꾀하는 것이다. 소설·영화·가극 등으로 만들어졌던 북한의 5대 혁명 가극인 '피바다'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당의 참된 딸' '금강산의 노래' 의 주제를 매개하는 주요한 기능을 모두 여성이 담당하고 있다.

문화 예술 체육 등의 각 분야에서 활동하는 여성들은 그 역할이 체제유지와 선전에 기여한다 하더라도 일정한 전문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분야와는 차이가 있다. 문학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로는 박미성을 들 수 있는데, '김일성 계관인' 의 칭호를 받은 여류 시인으로 김정일화를 소재로한 시 '김정일화' 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대표적인 여류 시인으로서 위치를 굳혔다. 예술 분야의 원로 민요 작곡가

및 가수로는 김관보가 알려졌는데, 그는 평양음대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북한의 대표적 민요인 '모란봉', '맑은 아침의 나라'를 처음 불렀고, '바다의 노래'도 작곡하였다.

문화 활동이 근본적으로 각자의 소질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북한 여성들의 문화 활동은 다른 분야에 비하여 차별 받지 않는 편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 있어서 당의 요구 즉 주민의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높여야 한다는 요구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외적 제약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문화예술 분야의 정책이나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이 분야의 여성들은 소외받고 있다.

③ 여성의 조직 생활

현재 북한의 주요한 사회단체는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직업동맹', '여성동맹', '농업근로자동맹', '문학예술가 총동맹' 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의 사회단체는 자유주의 체제에서의 이익 집단이나 압력단체와 같은 자발적 결사체의 성격과는 거리가 멀다.

북한의 사회단체에서 여성의 역할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조선민주여성동맹'(여맹)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여맹은 1945년 11월 18일 '북조선 민주여성동맹'으로 창립되어 1951년 1월에 소위 남북 조선여성동맹 합동중앙위원회에서 '조선민주여성동맹'으로 통합, 개칭되어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여맹의 조직체계는 여맹 중앙위로부터 도, 시, 군,

동, 리에까지 광범하게 조직되어 당의 외곽 단체로서 또한 당의 인전대로서 활동하였다.

여맹은 건국과 전쟁 및 전후 복구의 역경의 시기에 여성을 가정으로부터 끌어내어 사회적 생산 활동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견인차가 되었으며, 각종의 대회, 궐기모임, 학습회, 토론회 등을 통하여 여성의 사상개조와 혁명화에 앞장섰다. 초기 여맹의 활동은 '민주여성총동맹'의 강령 7개항에 밝혀진 대로 정권 수립에의 역량집중, 반파쇼·반일·반제국주의 투쟁, 조선문화발전, 여성의 문맹퇴치와 생활개선, 여성옹호, 봉건적 도덕인습·미신타파에 집중되었다.

그러나 여맹은 1970년 11월 제5차 조선노동당 당대회 이후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라는 체계적 요구에 따라 1971년 제4차 대회를 개최하면서 혁명적인 여성동원보다는 3대혁명과업의 수행을 여성의 주요 활동 목표로 선언하였고, 공산주의적 자녀 양육과 가정의 혁명화라는 '녀성다운 활동'을 촉구하는 단체로 변질되었다. 3대혁명과업에 따라 여맹에 주어진 역할은 '강반석 어머니 따라 배우기', '기술혁명과업으로 기술 혁신' '문화혁명과업으로 공산주의적 어머니를 만드는 것' 등이었다.

이어서 김정일의 후계체제가 가속화되기 시작한 1983년 여맹은 그 규모가 급격히 축소되기 시작한다. 여맹은 18~55세의 모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전체 여성의 조직이었으므로, 여맹원들은 직맹, 사로청, 농근맹에 중복 가입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 시점을 계기로 여맹가입 연령은

30~55세로 축소되었고, 직맹 등 다른 단체에 가입된 여성은 가입되지 않았다. 여맹의 구성원은 전체 여성 대상에서 노령여성과 미취업 주부를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여맹의 위축은 김정일과 김성애의 갈등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김정일이 김성애의 영향력 확대를 꺼리는 한편, 부자세습체제에 대한 사회체제의 구축을 위해 여맹의 축소를 요구하였다는 분석이다. 현재, 여맹은 당·정간부의 부인들이 가두여성의 노력동원과 사상교양을 촉구하는 단체로 그 범위가 위축된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을 종합하여 볼 때, 한 때 맹원 270만의 대규모 사회단체로 건국과 전후복구기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온 여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김정일 후계체제의 확립이라는 정치적 요구로 축소되고, 주부들만을 대상으로 제한적 활동만을 전개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2. 남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

인간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성별에 따른 보편적 특성을 기대하며, 이러한 특성들은 각 사회의 고유한 문화에 따라 서로 다른 모습들로 나타나게 된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성(性)에 따라 분류되고 그의 일반화된 성적 특성에 맞추어 사회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전통사회로부터 현대사회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한 여성의

지위와 역할은 어떻게 기대되어졌으며 또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시대적 활동, 분야별 실상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한 사회에서 다른 사회로의 변동은 그 사회의 구조적 변화뿐만 아니라 이전 사회를 구성했던 인적·물적 구성 인자들의 성격에 변화를 가져온다. 실제로 한국 사회의 구조가 전통적인 사회로부터 근대를 거쳐 현대 산업화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와 역할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1960년대 이후 본격적인 산업화 과정에서 여성의 노동력은 가정생활에만 국한되지 않았으며, 경제 활동과 사회 활동을 통해 그 활동 영역이 확대되었는데, 이는 이전 사회와 비교해 볼 때 단순히 활동 영역의 확대뿐 아니라 여성들의 지위와 역할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1) 해방 이후의 여성의 지위

해방 이후 식민지 지배를 통해 억압되었던 우리 민족의 역량이 폭발적으로 분출하자 여성들도 정치적 역량의 결집을 꾀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 수립 초기에 있어서 소수 여성 단체장의 정치 참여를 제외한다면 여성의 지위 상승은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그것은 이 시기에 전통적인 여성관 즉, 현모양처의 이상형과 남존여비 사상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수동적 여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가부장제 이데올로기가 전통과 미풍양속의 보전이라는 측면에서 사회 활동과 학교 기관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진 데에서 비롯되었다.

한국전쟁 이후 여성들은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받았으며, 농업·공업 부문에서 저임금 또는 무보수 노동력의 제공자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머물렀다. 전쟁으로 남편과 자녀를 잃은 여성들은 직접 생계 유지를 위한 사회활동에 참여했으나 자아발전이나 삶의 질적 향상을 위한 자발적 참여와는 거리가 멀었다.

1960년대 이후 여성의 경제 활동과 사회 참여가 확대되었지만 동시에 여성들의 수동성, 순종성, 희생 정신이 강조되고 이용되었다. 따라서 여성들은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면서도 자신의 일에 긍지를 갖지 못하고 오히려 좌절감으로 인해 전업 주부의 현모 양처상을 이상적 모델로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197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 과정에서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가정적·사회적 생활에서의 지위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전통적 가족 규범인 가부장적 권위주의가 가정, 학교, 사회 제영역에 엄존함으로써 민주적 역할 관계의 정립이 지연되어 경제적·의식적 측면에서 의존적 위치에 머물렀다는 점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고 과거에 비해 사무관리직, 생산직에 종사하는 여성들이 증가하여 어느 정도 여성의 지위가 질적 측면에서 향상된 모습을 보였다. 또한 여성들의 의식수준 향상으로 대중적 여성운동이 활성화되었으며 이에 대한 국가의 대응 방식도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정부는 여성부문을 독자적 정치 영역으로 상정하고 여성 문제에 점차 관심을 가졌다.

(2)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①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

어느 사회에서나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역할을 논할 때는 무엇보다도 가정이라는 사회집단의 맥락을 떠나서 생각하기 어렵다. 이처럼 중요한 사회집단인 가정이 성립되고 유지되려면 남성과 여성이 모두 있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성의 역할은 가장 결정적인 측면에서 두드러진다. 출산에 의한 가족의 존속은 물론, 자녀의 양육과 사회화, 가족성원의 정서적 생활의 관리 등 가족 자체 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존속을 위한 사회구성원의 충원 및 정상적인 기능을 위해서 불가결한 중심적인 역할을 여성이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화의 물결에서 종래 광범위한 가족의 제도적 기능들이 독립되고 전문화된 제도들로 분화되어 나가면서 가족의 상대적 중요성이 낮아지게 되었다. 산업화로 인하여 가족 구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는데 그 내용은 첫째, 가사 이외의 노동력의 필요성이 없어짐으로써 부부 중심의 핵가족 단위가 되었으며 둘째, 부부간에 생산과 소비의 역할 분담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남편의 직업활동은 외국까지 연장되어 부부간에 지역적 격리 생활이 심각한 불안을 조장하고 있으며 더욱이 피임 기술의 발달로 자녀 출산과 양육의 기간이 단축됨으로써 여성들의 가정내 역할은 극히 축소된 한편, 사회의 공적 직책과 역할에서는 더욱 소외당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현재 한국 중산층 가정의 주부들은 그들의 여가를 소비생활과 친족 방문 등으로 가정 생활을 분주하게 메워 나가고 있다. 그들은 주부로서의 가정적 역할에 계속 전념할 뿐 사회참여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핵가족 시대의 여성들은 자아실현과 생산적 생활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불만을 깊이 느끼기도 한다. 이것을 극복하려는 노력으로 오락과 취미활동의 기회를 가족적으로 마련하며 공허감을 메워가려고 하지만 직업 중심의 생활로 인해 만족스런 결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

② 정치 생활과 여성의 역할

우리 나라에서는 여성의 참정권이 1948년 정치적 이유에서 주어졌기 때문에 참정권 운동의 역사가 없지만 영국이나 미국 등 선진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여성 운동이 참정권 운동으로 시작된다.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성들이 자유와 평등이라는 근대적인 자아에 눈뜨면서 가장 먼저 요구한 기본권이기 때문이다. 경제권과 더불어 참정권은 근대 사회에서 여성이 확보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한국 여성의 참정권은 1948년 정부 수립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총선거를 치르기 위해 주어졌다. 여성의 문맹률이 90%이상이었고 단독 정부 수립을 반대한 정치 세력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여성에게 부여된 참정권은 정치적으로나 여성들에게나 별 의미가 없었다. 이렇게 시작된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역대 정권에 걸쳐 첫째, 여성의 의회 참여율이 매우 낮

으며 둘째, 여성의 의회 진출이 대부분 지역구나 정당 활동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 전국구 비례대표제나 통일주체국민회의 등을 통한 것으로, 위로부터의 정치적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특징을 나타낸다.

우리 나라의 경우 여성의 정치 의식이 남성보다 낮다는 것이 일반적인 정설이다. 그러나 1990년 이후 남성에 비해 여전히 정치 의식이 뒤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도시의 고학력 여성들은 정치적 관심이 남성에 뒷지 않게 높으며, 성차별에 대한 인식이나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는 남성을 능가하고 있다. 한국 여성의 정치 의식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은 정치적 관심이 남성에 비해 낮다. 1992년 전국 유권자 1,000명에 대한 조사에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남녀 모두 높지만, 여성의 정치적 관심도는 남성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하의 조사결과는 1992년 9월 26일부터 10월 3일까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20세 이상 유권자 1000명(남성 491명, 여성 509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이승희, 1993. 참조). 여기에서 특기할 만한 점은 여성은 연령, 학력, 직업에 따른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20대와 50대, 국졸과 전문대졸, 농림 어업직과 전문직의 정치적 관심도나 효능감 정도의 차이는 남녀간의 차이보다 훨씬 크다. 이것은 앞으로 세대가 바뀌면 여성의 정치 의식이 급격히 변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투표 효능감(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자신

감)이나 정치적 행위의 효능감(자신의 정치적 행위가 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는 자신감), 지지 정당이나 후보 선택 기준에서는 성차가 큰 폭으로 나타나지 않는데 이것은 기존의 여성 정치 의식에 대한 통념이 재고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여성의 정치적 역할이나 정치 참여에 대한 인식은 여성이 남성을 앞선다. 여성의 지위 향상과 남녀 평등을 위해 여성의 정치 참여가 더욱 활발해져야 한다고 보는 비율은 여성이 남성보다 높고, 능력 있는 여성 후보에 대한 지지도는 남녀가 비슷하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 여성의 정치 의식은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 규범을 따르고 있는 고연령, 저학력, 농촌 지역 여성들은 여전히 정치 의식의 낙후성을 보여 주지만 젊은 세대, 고학력, 도시 지역 거주 여성들은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것은 시간이 지날수록 여성들의 정치 의식이 발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경제생활과 여성의 역할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사회적 노동에 참여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경제 발전 수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선진 자본주의 나라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은 평균 60-70%이상이며, 우리나라도 1992년 현재 47.3%정도로 전체 여성 인구의 절반 가량이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성 노동력의 참여는 지난 20-30여년간

눈에 띄게 증가하였으며 미혼 여성뿐만 아니라 기혼 여성의 취업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 나라 여성 노동 시장의 구조적 특성은 일반적으로 저연령 미혼 여성이 경공업 부문에 저임금 노동력군으로 편중되어 있으나 최근에는 이 같은 구조적 특성에 점차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였다. 연령별로는 24세 이하의 연령층이 계속 감소하고 25~39세 사이 연령층의 경제 활동 참여가 증대한다. 아울러 기혼 여성 노동자의 비율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최근 기혼 여성 노동자의 참여가 늘어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 있다. 우선 연소 연령층의 인구 감소와 교육 수준 상승으로 생긴 미혼 여성 노동력의 부족 현상도 한 요인이며, 1970년대 이래 미혼 여성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정당한 몫과 권리에 대한 인식이 점점 높아지자 기업으로서는 더 낮은 임금의 노동자를 찾기 위한 결과이기도 하다. 기혼 여성 노동자들은 미혼 여성들이 기피하는 열악한 조건의 노동과 낮은 임금을 감수하며 취업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기혼 여성 노동자의 증가는 이들이 미혼 때도 대부분 노동자였고 재취업을 통해 다시 노동자가 됨으로써 한편으로는 여성 노동자의 정체감과 지속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갖기도 한다.

(3) 여성 운동

우리나라 최초의 여성 단체활동은 1900년을 기점으로 근대화와 개화 운동과의 시대적 상황에 의한 애국애족 운동으

로 전환되어지면서 부터이며, 특히 기독교 문화의 유입으로 여성의 개화와 함께 여성들의 사회 참여를 유도하는 통로가 열리기 시작하였다. 국채보상운동 및 3.1만세운동에서의 여성의 참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명분과 이념에 의한 운동이었기 때문에 사회의 지지 기반도 확실했다.

해방 이후 미국 중심의 세계자본주의 체제가 들어옴으로써 사회분위기는 세분화되고 전문화되어 소수에 의한 권력의 독점과 경제적 이익은 계층간의 문제를 심화시키면서 다양한 사회 문제가 노출되었고, 여성 문제 역시 억압 상황에서 사회 표면에 드러나게 되었다. 해방 이후 남한에서의 여성의 지위와 역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노력은 북한과는 달리 조직적 생활을 통해서라기 보다 여성 단체들의 운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성 운동은 해방 이후 국민 생활 개선, 문맹 퇴치 운동, 1950년대의 여성의 교양과 여가 선용을 목적으로 한 여성 단체의 등장, 1960년대의 소비 생활, 식생활 개선 등의 내용으로 전개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서면서 도시와 농촌에서 사회 경제적으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으며, 급속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정치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가 강화되었다. 이 시기에 일부 여성 운동은 여성 운동의 과제를 민주화 달성과 여성 노동의 사회화에 두기도 하였다. 여성 단체에서는 가족법 개정 운동, 기생 관광 반대 운동 등을 벌였고, 여성 노동자들은 생산직만이 아니라 사무직에서도 노동 조건 개선과 여성 노동자의 특수 요구를 반영하기 위한 투쟁에 나섰다.

여성 단체들은 활동 목적을 여성의 지위 향상에 한정짓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 타파와 한국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포괄하고 있었다. 중산층이 중심이었던 이전과는 달리 노동자, 농민, 빈민, 지식인, 가정주부 등 다양한 계층의 여성 운동이 이루어졌고, 활동영역도 통일 운동, 공해 추방 운동, 교사 및 학부모 등의 교육 운동, 탁아, 학술, 문화, 종교 운동 등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여성 운동의 과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의 정치 세력화란 문제가 중요하게 인식되어 여성의 정치 참여를 위한 활발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대부분의 단체들은 중앙정부 각부처에 등록되어 있는 정부등록 단체로서 다양한 법인체의 형태로 정부 부처에 70여개가 등록되어 있으며 지방에는 이들 단체의 지부가 있어 전체 회원수가 815만명에 달한다. (한국여성개발원, 1991. 참조) 1980년대 우리 사회의 혼란과 변혁기에 등장한 자생단체들이 주류를 이루는 비등록단체의 숫자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비등록단체의 대표적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대중조직을 기반으로 일반 여성들이 놓여 있는 다양한 현실을 운동의 이념으로 제시하였고 이후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민우회'와 새로운 지역 여성 단체들이 속속 결성되어 여성의 지위 향상 뿐 아니라 정치적, 경제적, 불평등 타파와 한국 사회의 자주, 민주, 통일의 과제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1980년대 후반에 들어와서 각단체들의 중요한 활동상을

보면 '세계여성대회'를 포함한 각종 국제관련사업과 성차별 개선, 여성능력 개발 및 사회참여 확대 등에 관심을 가져 왔고, 결혼 퇴직제 반대운동, 부천서 성고문 규탄활동, 여대생 추행 대책활동, 최루탄 추방운동 등 민주화운동으로 이어지면서 근로여성 문제, 매춘여성 문제와 같은 사회적으로 소외된 여성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점에서 또한 북한여성 연구, 통일 문제, 환경 문제, 농촌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관심의 대상이 확대되고 참여 범위도 여성 지식인 중심에서 여성 대중으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1990년대 들어 여성의 정치 참여는 여성 단체들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으며, 미술, 연극, 언론, 영화, 문학 등에서도 페미니즘 문화 활동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 있는 가부장적 문화를 극복하려는 움직임이라 할 수 있다.

Ⅲ. 남북한 여성의 통일에 대한 인식

1. 북한 여성의 통일에 대한 인식

북한사회체제의 사회·문화적 특이성 즉, 획일적·폐쇄적·집단주의적 성격으로 인해 북한사회는 획일적이고 단순한 가치만이 존재한다. 따라서 북한 여성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북한 당국의 공식적 통일정책이 사상교육을 통해 여성의 통일의식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1) 통일에 대한 의식구조

1980년대 이후 북한여성들이 느끼고 있는 통일에 대한 인식은 초기의 '남조선해방론'에 입각한 단순한 체제통일론이 아니다. 북한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의식구조는 1945년 이후 계속되는 '민족해방' 차원에서의 통일과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체제에 대한 패배의식 그리고 신화적인 통일 열기가 복잡하게 혼재되어 전개되었다.

1945년 해방이후부터 현재까지 공식적인 북한의 통일에 대한 인식과 그에 따른 통일정책은 '하나의 조선' 논리에 입각한, '해방'과 '혁명'의 논리로 접근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남한은 '해방'의 대상이고 '혁명'의 대상일 뿐이다.

조선민주여성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조선 녀성(1994)」를 보면, '조선로동당은 사회주의 위업을 빛나게 수행해 나가는 강철의 당', '천배배의 복수를', '불굴의 혁명정신을 본받아' 등의 제목으로 여전히 '남조선해방'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남포시 신애필 녀성이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기 겪은 이야기'란 부제의 '천백배의 복수를'에서는 북한여성의 통일에 대한 의식이 여전히 '남조선해방론'에 입각해 있음을 다음과 같이 잘 보여주고 있다.

"성민아, 지난 조국해방 전쟁시기 미제 원쑤놈들이 할아버지를 무참히 학살하고 할머니에게 감행한 만행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된다. 세월이 흘러도 원쑤놈들의 침략본성은 변하지 않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일 장군님의 전사답게 계급적 근본을 깊이 자각하고 군사복무를 잘하거라"… 미제와 남조선괴뢰 도당은 지금 이 시각도 우리를 삼키려 피묻은 이발을 갈며 전쟁의 검은 구름을 몰아오고 있다… 우리들은 우리 인민에게 천추에 용납못할 야수적 만행을 저지른 미제 침략자들과 그 주구들을 천백배로 복수하여야 한다.

최근에 북한을 방문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바에 의하면, "우리 민족이 살 길은 통일 뿐이다.", "1995년에는 반드시 통일이 이루어진다." 라는 등 대부분의 주민들이 통일에 관해 강한 열망과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1990년 10월 제2차 남북고위급회담을 수행했던 세계일보의 어느 기자는 한마디로 "평양은 '통일'이란 구호에 집단 최면된 도시"라고 표현했다. 조선일보의 한 기자도 "북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95년을 통일의 해로 꼽고 있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물으면 대답도 하나같이 '수령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였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엄청난 통일 열기를 대변하듯, 평양에는 통일거리란 이름의 새거리가 생겨났고, 90년에는 8·15 '해방 기념일'을 계기로 '조국통일상'이 제정되어 무려 112명에 이르는 수

상자 명단이 발표되었다. 뿐만 아니라 '통일아 이제 더 못 참겠다' 란 제목의 가요조차 보급되고 있다.

최근 북한 귀순자들은 북한의 여성들도 대부분 '부유하고 안락하게 살고 싶다' 는 소망을 갖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돈이 날개' 라는 유행어가 이러한 현상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이상 통일 열기는 김일성 김정일 체제가 체제유지의 한 방편으로, 통일이란 또 하나의 '신화' 를 북한 사회에 창조해 냄으로써 이것을 오늘의 어려움을 참아나가야 한다는 대주민 설득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북한경제가 북한 주민의 일용양식조차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북한주민의 불만을 더욱 가중시켜 궁극적으로는 체제에 대한 불만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에 북한 주민을 무마시키기 위하여 '95년은 통일의 해' 이므로 조금만 더 참으면 남한을 해방시킬 수 있다는 집단심리적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이러한 집단최면적 심리조작에 더욱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이에 대한 단적인 예로, 95년 통일설을 확신하는 백화원 초대소의 한 여자 접대원은 "95년에 통일이 되면 남쪽 총각에게 시집가겠다" 고 공언하기도 했다.

최근 조총련 방북자들 및 귀순자들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대부분의 북한 주민들은 '사회주의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인민들이 먹고 살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 며 삶의 의욕마저 상실하고 있다는 것이다. 1994년 귀순한 여만철씨 부인

의 TV 대담을 통한 증언에 따르면, 다른 모든 것은 다 참을 수 있었지만, 아이들이 배가 고파 잠이 안온다며 엄마인 자신에게 먹을 것 좀 없느냐고 물어올 때가 가장 가슴이 아팠다고 말했다. 또 당·정 간부들도 '이 체제로는 안되기 때문에 다른 활력소가 필요하다', '향후 경제 전망이 너무 불투명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 등으로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회의감을 표출하고 있다. 이 밖에 해외공관원들 사이에는 '이미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에 패배했다'는 인식이 널리 만연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주민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자들 또한 독일통일이 실현되자 남한에 의해 흡수통합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는 태도를 보였다. 김일성은 1988년 9월 8일 정권수립 40주년 경축보고대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누가 누구를 먹거나 먹히우지 않고 일방이 타방을 압도하거나 압도당하지 않는 공존의 원칙에서 두 제도를 두 자치정부를 련합하는 방법으로 하나의 통일국가를 형성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공존의 원칙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또한 김일성은 1991년 '신년사'에서 "최근 다른 나라의 흡수통일방식에 현혹된 남조선당국자들은 북방정책을 내걸고 청탁외교를 벌리면서 남의 힘을 빌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방식을 실현해 보려는 어리석은 꿈을 꾸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흡수통일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여성들의 통일관 역시 이념에 입각한 기존의 공세적 입장을 더이상 견지할 수 없게 되었고, 오

히려 경제침체에 따른 남북한 격차의 심화로 흡수통일을 우려하는 수세적 입장에 놓이게 되었다.

(2) 통일방안에 대한 이해

북한 여성들은 개인의 선택과는 상관없이 요람으로부터 무덤까지 정치사상교육의 대상이 된다. 학교기관과 직장과 인민반, 그리고 여맹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정치사상교육을 받게 된다. 이러한 조직들을 통해 북한 여성들은 북한의 통치이데올로기에 알맞는 정치사상교육을 제도적으로 받게 되었다. 따라서 북한 여성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북한 당국의 통일방안의 변화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해방직후 북한의 초기 통일정책은 '남조선해방론'의 입장에서 통일문제에 접근하고 있다. 1948년 3월24일, 김일성은 북조선 노동당 제2차 대회에서 행하였던 '중앙위원회 사업총화보고'에서 "조선 민족을 완전히 해방하기 위해서는 소련군 진주하의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여 북한지역에 공고한 민주기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더욱이 1950년 6월 25일 무력에 의한 적화통일 시도는 그들의 남조선 해방론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증거로 볼 수 있다.

북한은 한국전쟁이 끝나자마자 평화통일 주장을 신속히 내걸었고, 1950년대 내내 통일에 대한 집념을 강조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통일을 부차적인 위치로 끌어내리고, 국내의 경제 재건과 정치적 안정에 더 큰 관심을 보였다. 북한이

이토록 평화통일론을 주장하게 된 것은 전후 복구를 위한 일정기간의 평화유지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특히, 1960년 남한에서 일어난 4·19 혁명이 이승만 정권을 무너뜨리자 북한은 남한에 대해 더욱 강한 자신감을 갖고 평화통일 공세를 폈다. 북한의 평화통일 공세는 1960년 8월 14일 김일성의 8·15해방 15주년 기념연설에서 '연방제 통일'을 제안함으로써 사실상 정점에 이르게 된다. 그는 이 연설에서 '어떠한 외국의 간섭도 없이 민주주의적 기초우에서 자유로운 남북총선거를 실시하는것이 평화적 조국통일의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편'이라고 하면서 '만일 그래도 남조선 당국이 ...아직은 자유로운 남북 총선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도적인 대책으로서 남북조선의 련방제를 제의한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북한은 군사력의 증강을 위해 1962년 4대 군사노선을 제시하는 한편, 1964년 2월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4기 제9차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남조선 혁명론'을 최초로 정식화하였다. 이 회의에서 북한은 '3대혁명역량 강화론'을 제기였다. '3대혁명역량 강화'란, 첫째 "공화국 북반부에서 사회주의 건설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강화하는 것"이며, 둘째 "남조선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각성시키고 튼튼히 묶어 세움으로써 남조선의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며, 셋째 "조선인민과 국제혁명역량의 단결을 강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70년대 이후 북한은 우리의 6·23선언의 발표가 있었던

당일인 1973년 6월 23일 오후, 체코슬로바키아 공산당 총서기 구스타프 후사크 환영대회의 연설을 통해 조국통일 5대 강령이란 것을 내놓았다. 그 내용은 '고려연방공화국'을 국호로 하는 남북연방제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1980년대에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을 다시 제창하였는데, 이는 남북의 사상과 제도를 그대로 인정하고 동등하게 참여하는 민족통일정부를 수립하고, 그 밑에서 남북은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자는 것이었다.

1990년이래 현재까지 북한의 통일방안은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창설하여 통일을 이루는 것으로 요약된다.

1990년대에 들어오면서 북한의 연방제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1991년 신년사에서 김일성은 '1민족, 1국가, 2제도, 2정부에 기초한 연방제'를 제시했다. 즉, 김일성은 "남북에 서로 다른 두 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실정에서 조국통일은 누가 누구를 먹거나 누구에게 먹히우지 않는 원칙에서 하나의 민족, 하나의 국가, 두개 제도, 두개 정부에 기초한 련방제 방식으로 실현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하나의 국가, 하나의 제도에 의한 제도통일론은 분열을 끊임없이 지속시켜 결국 통일을 하지 말자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통일은 후대에 맡기자."고 했다.

2. 남한 여성의 통일에 대한 인식

(1) 통일에 대한 의식구조

오늘날 대부분의 남한 여성들은 분단 시대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분단의 현실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현실적으로 경제발전의 혜택을 많이 받은 계층의 여성일수록 통일문제에 소극적이거나 민족 분단의 현실을 애써 외면하려한다. 그리고 민족 분단의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해나갈 수 있는 역사적 인식과 민족의식을 조성하기 위한 여성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으며, 민주적 주권자로서 사회발전에 남성과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민주적 역량이 발휘되지 못하였다. 또한, 여성들이 민족의 현실에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간에 무관심하여 소극적 자세에 계속 머물고 있는 상태에서 민족 통일의 과업 수행에 별 다른 역할을 기대할 수 없었던 것이 사실이다.

아울러 최근 여성들의 통일의식 실태를 조사한 한 연구에 따르면 통일의식이 미약하다는 사실을 더욱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우리의 통일 정책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남성들은 22% 정도가 잘 모른다고 대답한 반면에, 여성들은 51% 정도가 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그리고 통일 전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도 여성들은 남성들 보다 더 비관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한의 고려 연방제 통일 방안에 대하여 얼마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서도 남

성들은 15%가 거의 모른다고 대답한 반면에, 여성들은 34% 정도가 거의 모른다고 대답하였다.

이러한 여성들의 통일에 관한 의식 구조의 실태를 고려할 때,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문화 속에서 개인적·가정적 생활에 안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 사회생활에 참여하는 여성들 조차도 민족적 차원에서의 통일의식에 많은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2) 통일 방안에 대한 이해

일본의 패전으로 민족의 해방을 맞이했을 때, 그동안 교육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 여성들은 국제 정세에 무지하였으며 통일된 독립 국가를 이룩하는 데 아무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었다. 언제부터인가 이러한 분단을 당연시하고 분단의 현실 속에 안주하여 살아가려는 태도가 부지불식 간에 만연되어 있다. 이러한 분단의 현실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는 앞에서의 통일의식 구조에 관한 한 연구에서 나타났듯이 여성들에게 더욱 심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여성들의 분단에 대한 인식은 민족적 정서와 맥락을 같이 해왔다고 볼 수 있다. 분단 초기까지는 순수한 민족 감정에 의해 통일에 대한 감상적 태도가 견지되었으며, 이러한 동질적 민족 감정은 6·25 전쟁을 거치면서 급격한 적대의식으로 변화하고 말았다. 특히 전쟁으로 남편, 자식들을 비롯한 친지 친척의 상실은 남한 여성들에게 엄청난 시련을 안겨다

주었다.

우리의 통일정책은 정권이 바뀜에 따라 많은 변화를 겪어 왔지만,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에 의해 통일을 이룩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큰 변함이 없었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우리 정부는 국제기구인 유엔의 감시하에 자유총선거를 통해 통일을 이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왔다. 그러나 평화 통일에의 꿈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무력 남침으로 산산이 부서졌으며 더욱이 3년간에 걸친 치열한 전쟁은 남북한 주민들에게 적대감을 불러일으켜 남북분단을 더욱 굳히는 결과를 낳고 말았다.

1960년 4·19 혁명에 의해 이승만 정권이 무너진 후, 민주화의 봇물이 터지자 진보적 인사들과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통일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다양한 주장들을 내놓았다. 말하자면, 정부가 주도했던 통일 논의가 국민들 사이에서도 비교적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1961년 군사정권이 들어서면서 '선건설 후통일'이라는 정부의 강력한 입장에 의해 통일 논의보다는 경제건설에 주력하였다.

1970년대 들어 지속적인 경제 성장에 따른 자신감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19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1972년에는 '7·4 남북공동성명'에 의해 '자주, 평화, 민족 대단결'이라는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이 세워졌다. 그 이후에도 우리 정부는 평화통일을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하였으나, 북한의 냉담한 반응으로 남북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1980년대에 이르러 우리의 통일 정책은 큰 발전을 보였다. 남한은 1982년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을 통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통일정책을 마련하였다.

1989년에는 평화, 민주의 원칙하에 단계적·점진적으로 통일을 이룩하자는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을 내놓았으며 이 통일방안은 남북대화에 많은 활력을 불어넣어, 1990년부터 남북한의 총리가 이끄는 고위급 회담이 열리기 시작하였다. 남북고위급 회담은 결국 1991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남북한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였다.

1993년 들어선 문민 정부는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기본골격을 바탕으로 하여, 1994년 8월 15일 통일 단계를 보다 명확히 제시하고 북한이 우려하는 흡수통일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을 내놓았다.

'민족 공동체 통일 방안'에 나타난 통일 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는 '화해 · 협력단계'로서, 남북한이 서로 신뢰를 쌓고 두개의 체제를 현실로 인정하면서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간다. 제2단계는 '남북연합단계'로서,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 여기에서 체제통일을 준비하며 남북한 사이에 서로 다른 요소들을 제거해 나간다. 제3단계는 1민족 1국가의 통일이 실현되는 단계인데, 통일국가는 민족구성원 모두가 하나가 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 정책의 변천과정에 대한 내용은 공식적인 학

교 교육이나 사회 교육을 통해 교육되고 있지만 여성들의 통일 방안에 대한 이해의 정도는 남성들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로 들 수 있는 것은 첫째, 여성들의 정치의식 수준이 남성들보다 낮다는 데서 찾아 볼 수 있다. 둘째, 그동안 여성들은 가정 내에서 자녀 출산 양육과 가사활동에 대부분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또 하나의 이유가 될 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전통적인 여성관으로 인하여 여성들은 아직도 모든 문제를 남성 의존적인 태도를 보이는 소극적인 역할에 안주하고 있다는 데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사회문제나 민족의 문제 등에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게 됨으로써 통일 방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의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통일문화 형성을 위한 여성의 역할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한반도의 통일을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자 한다. 그러나 해방 이후 불행하게도 체제와 이념을 달리하는 남북한 사회의 이질화된 생활은 이 시대의 염원인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통일 문화를 필요로 한다. 문화란 자연스럽게 전해온 생활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 의해 충분히 변화된 모습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 그 어느때보다도 통일의 분위기가 고조된 이 시대를 살

아가는 여성의 역할은 어떠한 모습으로 그려질 수 있을 지 살펴보도록 한다.

1. 가정에서의 통일교육 담당자

일반적으로 가정은 사회화의 주요 관리 기구로서 자녀들의 정치학습에 중요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가정은 자라나는 자녀들의 기초적 인성, 사회관, 자아 개념의 형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오늘날 대부분의 가정은 산업화의 영향으로 핵가족으로 변화하여 왔다. 이러한 변화는 현대 산업사회에 적합한 구조와 기능을 갖추었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면도 가지지만 가정 내의 구성원간의 역할 갈등이나 가치관 혼란 등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가정의 본질이 가족 구성원의 안락한 생활과 부양 관계를 유지하는 공동체라고 한다면, 오늘날의 가정은 이러한 기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우리 사회는 자유 민주 사회로 인간의 존엄성을 중시하며 더불어 살아 갈 줄 아는, 민주 시민 의식을 갖춘 시민을 필요로 한다. 가정은 바로 민주 시민을 길러내는 기초적인 사회 집단이며, 어머니로서 여성은 자녀의 시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사람이다. 전통적인 대가족 제도에서 핵가족 제도로 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은 여전히 가정의 상실된 기능을 회복시키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즉 여성은 가정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녀

의 초기 사회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남한의 여성들은 그동안 상당히 낮은 정치의식 속에서 민주주의 발전이나 통일에 대한 관심보다는 경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왔다. 1992년 전국 유권자 1,000명에 대한 조사에서 정치적 관심 분야에 대한 내용을 보면, 여성은 경제 문제(53.2%)에 가장 관심이 많고 그 다음은 사회 모순(16.5%), 경제발전(13.6%) 순으로 나타났다.

통일에 대비한 하나의 노력으로서 여성들은 우선 스스로의 정치의식을 함양해야 할 것이다. 여성들은 오랫동안 의존적인 상태로 자주적 정치의식을 기르는 데 소외되었거나 소극적이었으므로 역사의식의 결여를 자각할 수 없었다. 가정에서 중요한 교육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여성이 통일 문화를 형성하는 데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미래의 민족 역사를 창조해야 할 사회 구성원의 입장에서, 동참자로서의 자신을 우선 인식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생활에서부터 이에 필요한 의지와 정열 그리고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민족적 긍지를 가지고 조국의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간을 길러 내는 데 한국의 어머니들은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어머니들은 지금껏 누린 자기 가족의 계층적 상승 이동을 자녀들의 출세와 성공으로 지속시키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온 것이 사실이다. 자녀들의 자질이나 개성을 살려 민족이나 인류 사회속에서 진실로 인간답게 살아갈 것을 기원하는 모성애는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어머니 밑에서 자

란 아이는 역시 근시안적으로 자신의 영달과 발전에만 파묻혀 일생을 보내게 될 것이고 이러한 자기중심적인 생활에서 자라난 사회구성원이 만들어내는 정치 문화는 화해와 협력을 필요로 하는 통일 시대의 민주시민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가정에서의 여성은 민족 분열과 국토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서 가족 구성원의 민주적 역량을 배양하며, 다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통일국가를 이룩하기 위한 자녀 교육 방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가족구성원들 간의 여러 가지 역할 갈등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에서부터 통일과 관련된 현실적인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문제들을 가족의 토론장으로 이끌어내는 것까지 그 방법은 다양하게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통일 세대의 아동들로 하여금 자기중심적인 권위주의 문화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하고 대화를 통한 합의의 문화를 창출하는 데 어머니로서 교육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통일이 지향하는 사회의 성격은 인간 존엄성이 최대한 존중되는 사회, 모든 사람이 자유를 누리고, 자유에 따르는 책임을 질 줄 아는 사회, 모든 차이와 갈등과 대립이 합리적이고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회, 공동체 의식이 충실한 구성원들의 협동과 봉사가 특징인 사회, 도의로 다스려지는 사회, 정신적 풍요에 더하여 경제적 번영을 누리는 사회 등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통일 문화의 형성은 어릴 때부터 함양되지 않으면 안된다. 가정에서의 통일 교육 담당자로서 여성들의 중요한 역할은 자녀들로 하여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도 상대방을 존중할 줄 알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면서도 남을 도울 줄 알고 실리를 추구하면서도 착한 것을 좋아하며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민주 시민으로서의 기본 습관을 형성시키는 것이다.

2. 사회활동을 통한 통일 운동

여성들이 사회 활동을 통하여 통일 문화 형성에 기여하는 길은 성인교육과 각종 여성 단체를 통한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다.

남한의 성인교육은 학교교육을 제외한 사회교육의 일부로서 직업훈련, 학력 보충, 교양 함양, 취미, 오락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성인교육은 교육 참가자가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내용과 방법으로 교육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

사회교육의 영역으로는 (1)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교육과 교양 교육, (2) 직업·기술 및 전문교육, (3) 건강 및 보건 교육, (4) 가족 생활 교육, (5) 지역사회 교육, (6) 여가 교육, (7) 국제 이해 교육, (8) 국민 독서 교육, (9) 전통 문화 이해 교육, (10) 기타 등으로 광범위하게 규정되고 있다.

이러한 영역 가운데 통일 문화 형성을 위한 각종 여성 단

체들의 활동 가능 영역은 국민 생활에 필요한 기초 지식과 교양 교육, 가족 생활 교육, 지역사회 교육, 국제 이해 교육, 국민 독서 교육, 전통 문화 이해 교육 등이다. 이러한 교육 영역을 통하여 각종 여성 단체들은 남북 분단의 원인과 과정, 통일 정책과 방안, 통일의 필요성, 통일 후의 미래상, 통일을 위한 자세 등의 내용을 기존의 활동 프로그램에 보완, 반영시켜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동서독의 분단 극복을 위한 통일전 서독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부터 많은 시사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첫째, 서독 정부에서는 독일 문제의 다양성과 정보 수요의 점증성을 고려하여 각종 자료를 수집, 출판하거나 또는 외부의 저작 활동을 촉진 지원하였으며 이와 함께 출판물들을 시민과 학생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거나 염가로 판매하고 다양한 화보 및 달력들을 제작 배포하였다. 둘째, 독일 문제와 동독의 실상황에 관한 필름의 준비를 들 수 있다. 동독 또는 서독에서 촬영된 약 150편의 필름이 소장되었으며 신청시 언제나 무료로 대여되었다. 셋째, 독일 통일, 양독체제 비교, 양독관계의 문제점 및 발전 과정, 베를린 문제 등을 주제로 하는 각종 세미나를 주관하였다. 이 세미나는 학생, 군인, 교사, 언론인, 학자, 노조 및 정당원을 대상으로 하며, 정치적으로 관심 있는 영역에 대하여 토론을 통한 의견 교환의 기회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끝으로 서독의 시민들 개개인이 필요로 하고 있는 조언 및 도움을 제공하는 일이다. 이는 주로 동독 여행, 편지 발송 및 선물

우송, 동독 체재시 화폐 교환, 동독 주민의 서독으로의 이주 문제에 대한 조언을 포함하였다.

우리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여성단체들은 통일 문화 형성을 위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북한과 북한 여성에 대하여 바로 알도록 관심을 기울이고, 통일이 여성을 배제한 정부 당국 또는 남성들만의 한갓 독점물로 여겨져서는 안된다는 인식 하에 통일 운동의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이러한 프로그램의 개발은 여성단체만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겠지만 정부 부처와의 다각적인 접촉과 TV를 비롯한 방송 매체와 언론 매체 등의 관련 프로그램 참여 요구 그리고 다양한 사회 활동을 통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사회 활동을 통한 통일 운동은 통일 교육을 중요한 사업 중의 하나로 추진하며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기본 입장, 통일 방안, 북한의 실상에 대해 바로 알도록 계몽함으로써 북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남북한간의 공통점을 찾아내어 동질성을 회복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다.

3. 사회·문화적 교류 및 협력

민족의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실천적이면서 구체적 방법은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에서부터 찾아질 수 있다. 실제로 1991년 남북한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함으로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남북 교류 협력의 본격적인 추진과 평화적인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서 신경제 5개년 계획(1993~1997)과 제7차 경제 사회 발전 5개년 계획(1992~1996)에 남북 교류 협력 부문 계획을 설정하여 남북 교류 협력 촉진 방안과 이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남북 교류 협력은 남북한이 합의하여 공동으로 추진함으로써 실현되는 것이겠으나, 우리가 적극적 교류 협력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이에 호응해 오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1971년의 남북접촉이 시작된 이래 1993년 8월말까지 남북한간에 총 2,411 명의 왕래가 있었다. 남북한 상호 방문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은 정부 차원 내지는 준정부적 차원에서의 교류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순수한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종교와 학술 교류 분야에서 미미하게 이루어졌을 뿐이다.

주민간 접촉을 위한 신청 건수가 계속 증가하여 왔는데(1990년: 19.6건, 1991년: 62.7건, 1992년:66.8건, 1993년:99건) 그 성사 건수 비율은 비교적 낮다. (1990년:22%, 1991년:32%, 1992년:27%, 1993년:14%) 이것을 분야별로 보았을 때 학술, 이산가족, 경제, 문화의 순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학술 분야와 문화 예술 분야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많은 이유는 성격상 일회에 대규모의 인원을 동반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치적 성향이 다른 부문에 비하여 덜한

데에 그 원인이 있다. 문화 학술 분야는 무엇보다도 그 성격상 여성에게 얼마든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문이다. 통일의 길목을 트는 일은 서로의 왕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할 때 이러한 부문에서의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는 앞으로 통일을 위해서 무엇에 어떻게 참여할 것인지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남북한간에는 교류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합의는 있으나 교류 및 협력이 실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고 할 수는 없다. 남북한간의 정치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민간적인 교류는 너무 쉽게 영향을 받아 왔다. 앞으로는 정부도 민간 부문에서 각 분야별 교류와 접촉이 활발히 이루어지도록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여성의 입장에서도 북한의 여성 단체와 접촉할 수 있는 단체를 양성화하고 다양화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통일 추진의 국민적 합의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여성도 교류 협력의 주체로서 위치를 확보할 수 있게 됨을 뜻한다.

남북한간의 사회 문화적 교류와 협력의 공통적 바탕은 민족 의식이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교류 협력도 민족 의식을 일깨움으로서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의 역사에서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위기에 처한 민족의 운명을 살려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사실은 도처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당시 행주대첩, 3·1운동에서의 여성의 역할 등)

오늘날 우리 민족의 분단을 하나의 민족적 위기라고 가

정할 때 여성들은, 가정과 사회에서 뿐만 아니라 민족이라는 거시적 측면에서도 책임감을 갖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그것은 통일로부터 물질적 보상만을 생각하기보다는 정신적 보상 즉 민족의 발전과 번영이라는 측면에서 여성들도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는 데 기여해야 할 것이다.

4. 민족정체성 확립을 위한 노력

남북한 여성들은 통일의 주역으로서 발돋움하기 위해서 민족 정체성의 본질을 이해하고, 분단 반세기 동안 남북한간 이질화된 민족성을 통합하기 위한 실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식민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지만 분단 시대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민족적 자아를 확인하고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우선 그 정체를 선명하게 드러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

남북분단이 우리민족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타율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통일문제는 오직 남북한 당사자들만이 해결할 수 있는 민족사적 소명이다. 북한은 '민족 해방론'에 입각한 통일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남한은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통한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통일의 목표로 삼고 있다. 그 내용은 다르다 할 지라도 쌍방의 통일의 방향에는 민족을 배제하고 있지 않다. 진정한 의미의 남북통일은 그 주관자로

서 '민족'을 배제시키고는 이루어 질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의 주관자인 '민족'에 관한 인식은 곧 통일에 관한 인식의 출발점이 된다.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반만년 동안 하나의 공동체적 삶을 영위해 오면서 형성된 민족고유의 문화전통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우리는 한민족(韓民族)이다. 한민족(韓民族)은 우리가 원하여 태어난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괴롭다고 하루아침에 떠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점에서 민족은 괴로우나 즐거우나 언제나 떠날 수 없는 '영원한 나'이다. 이것은 남과 북으로 분단된 오늘에도 우리 민족이 어디에 살든 민족구성원 모두를 하나로 묶어 주고 결속하게 하는 연결고리가 되며, 갈라져 있는 민족의 재통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한민족이라는 동족의식을 키워나가고 동족간의 이질감을 해소해 나갈 수 있는 첩경은 남북 상호간에 교류를 촉진해 나감으로써 같은 민족으로서 문화와 전통의 공유부분을 확인하고 민족적인 유대감을 넓혀가는 것이다. 통일 한국의 바람직한 미래를 창출하기 위하여 현재의 상태를 인정하고 융화와 화합이 필요할 뿐 아니라 과거의 대립과 반목도 자신의 환부처럼 여기고 자기 몸의 일부로 포용해야 한다. 민족 정체성 형성에 환부로 인정되는 곳은 치료를 하고 심하면 정상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자발적인 수술을 단행해야 한다. 북한 여성의 경우 지금까지 왜곡되어 왔던 민족 개념에 대한 합리적 성찰이 필요하며, 남한 여성의 경

우 무분별하게 도입된 서구 문물에 대한 태도에 진지한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이러한 남북한 여성들의 성찰의 기회를 넓혀나가기 위해서는 남북한 여성들의 상호 접촉과 교류를 통한 현상(現狀)의 이해와 비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접촉은 상호 간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부드러움으로 남북한 간의 대립과 갈등을 완충해 주는 역할을 여성들이 담당하게 될 때, 남북한 관계는 한 차원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노력들은 결과적으로 민족 정체성의 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V. 맺은말 : 통일한국의 바람직한 여성상을 지향하며

오늘날 한반도에서 통일은 단순한 이상이 아닌 현실의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의 통일 비용에 대해서 경수로 지원 문제와 민족의 사회적 통합에 대한 논의가 이를 뒷받침한다. 통일 한국을 위한 여성에 관한 논의 역시 현실적 문제로서의 통일 논의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통일에서의 여성에 대한 논의는 소수의 일부 여성을 중심으로 진행되었거나 아니면 피상적이고 급진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형편이었다. 여기에서는 여성과 남성, 여성적인 것과 남성적인 것이라는 이분

법적 대립 구도 속에서 남성과 남성적인 것을 극복하려는 차원보다는 여성과 남성이 서로 조화와 협력을 통해 통일 시대의 여성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통일 한국에서의 여성상이란, 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으로서 통일에 관해 어떤 의식과 태도를 지니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로 정의해 볼 수 있다. 이는 통일 이전과 이후의 상황에 대한 예측 위에서 통일 시대의 여성에게 적절한 자세를 모색한다. 통일 시대는 통일 이전과 통일 이후로 나눌 수 있는데, 통일 이전의 시기는 통일을 기점으로 멀리 떨어진 시점이라기 보다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업이 시작되는 단계를 의미하며, 통일 이후의 시기는 통일 국가 직후를 뜻한다.

우리 민족의 통일은 인간 중심의 자유 민주주의를 기본으로 하여야 하며, 민족 구성원 개개인의 자유, 복지, 인간 존엄성이 보장되는 민족 공동체를 토대로 하여 건설되어야 한다. 통일 시대의 여성은 여성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다. 통일을 준비하고 통일 이후에 대비하는 여성은 좀 더 구체적으로 통일의 달성과 정착에 기여해야 한다. 해방 후 반세기를 거치면서 남북한은 이질화의 길을 걸어 왔다. 이러한 상황에서 통일 달성에의 노력 뿐만 아니라, 통일 후 이질감을 해소하고 사회 문화적인 통합을 위한 역할의 모색도 여성에게는 중대한 사명이 아닐 수 없다.

가정내에서 여성의 역할은 남북한의 유교적 관습을 따르

고 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한 면을 보인다. 여성은 가정에서 자녀의 어머니로서, 남편에 대한 아내로서, 그리고 교육의 담당자로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의 여성들은 북한 여성에 비하여 가족 이기주의, 물질주의 및 소비 지향적인 면이 강하다. 반면 북한의 여성은 가정에서 희생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정치 사회화의 역할이 강하다. 이러한 상이점은 통일 이후에 특히 북한 주부들에게 소외감, 상대적 박탈감 등을 조장할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남한의 여성들은 지나친 가족 이기주의와 물질주의로부터 벗어나 삶의 질적인 차원에서 만족, 행복, 신뢰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북한 여성의 경우, 정치적 참여는 남녀 평등의 차원에서 남한보다 상대적으로 양적 우위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에 기여하지 못하고 정치 선전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는 측면이 강하다. 반면 남한 여성의 경우, 가정과 사회에서 역할과 그에 대한 인식의 증가와 평등한 정치적 참여의 기회 보장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비해 낮은 수준의 정치적 활동과 참여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주로 유교적 문화 전통인 가부장제의 영향 때문이기도 하지만, 남한 여성들의 정치 의식이 낮은 데에서도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은 좀 더 자발적인 정치참여 의식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여성의 자발적인 정치 의식은 민주시민의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그 이유는 통일이 민주복지사회를 목표로 해야 하기 때문이다.

남북한 주민들 간의 의식과 가치관, 제도, 인간 관계의 규범 및 일상 생활의 습성 등 사회 문화 생활과 의식의 이질성은 쉽게 변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동질화시키는 노력에는 어려움이 많다. 동서독의 경우를 보더라도 20년간의 정치 경제 문화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통일은 실업과 과중한 세금 부담이라는 것 이외에도 서로 간의 차별과 감정적 충돌이라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그런데 이제 막 교류의 첫걸음을 내디딘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교류는 사회 문화적인 면보다는 서로에 단기적, 가시적 실리를 가져올 수 있는 경제적인 부분에 편중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여성들은 남성보다 더 섬세하고 온후한 면을 지니고 있으므로 사회 문화적 교류를 주도할 수 있도록 경주해야 한다. 여성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운동이나 학술 활동 등을 통해 지나친 연고주의, 지역주의 등 우리 사회 내부의 분할된 감정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고양시킴으로써 여성 특유의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남북한 여성들 간의 정보와 문화의 상호 교환은 민족 공동체의 형성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우리는 북한의 핵개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나 김일성 사후 북한에 대한 정보의 부족으로 답답함을 느낀 적을 생각한다면 정보와 문화의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를 알 수 있다. 서로 모르는 것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던 독일 역시, 통일 후 상대방에 대한 무지로 인해 커다란 비용을 치르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북한을 이해할 수 있는 정보의 체계화와 집적은 매

우 중요하다. 따라서 통일 시대의 여성은 남북한 여성간의 정보와 문화 교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남북한 사회문화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남북한 간에는 민족 개념에 관한 서로 다른 이해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주민들 간에는 상당히 강한 정도의 민족 공동체 의식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민족 감정은 여성을 비롯한 민간 차원의 교류를 확대함으로써 민족 공동체 형성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통일 시대의 여성은 민족 정체성의 형성이라는 입장에서 남북한간의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서로가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외세에 의해 진행된 분단 구조는 이념과 체제에 차이가 있지만 남북한 사회에는 동질성 또한 존재하고 있다. 북한 당국이 정권 유지적 차원에서 내세우고 있는 '우리식 사회주의'에서 '충'과 '효'를 강조하는 면이라든지, 남북한 사회에 공통적으로 잔존하고 있는 인정주의, 연고주의(지연, 혈연, 학연 등) 등의 발전적 전환은 남북한간의 동질성 회복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은 남북한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동질성에서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정확히 인식하고 점진적으로 긍정적인 면을 회복하고 발전시켜 나가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상의 논의를 기초로 할 때, 통일 시대의 여성이 지녀야 할 자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민족의 통일은 기본적으로 민족 구성원의 자

유, 복지, 인간 존엄성을 실현하고 증진시킬 수 있는 자유 민주주의를 바탕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향에서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기적으로 한민족의 발전과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통일이 이루어졌을 때, 여성의 자유와 평등도 한층 더 나은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소극적이었던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을 재고해야 할 것이다.

셋째, 우리 민족 분단의 책임은 남성 뿐만 아니라 여성을 포함한 한민족 모두에게 있다. 따라서 이 시대의 분단을 청산하고 민족 공동체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도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넷째,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는 모든 분야에서 개방성과 유연성을 지녀야 한다. 남북한 상호 논의 과정에서 여성들은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면서도 궁극적으로는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합리적으로 진행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여성들간의 교류 협력의 기회를 확대하여 북한 여성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지녀야 한다. 특히 인적 교류의 과정에서 민족애를 일깨우는 노력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통일 시대의 여성들은 남북한 여성들 간의 갈등과 반목을 줄이기 위하여 북한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갖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확산시킬 수 있는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통일 이후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는 이질화되어

온 남북한 주민의 사회문화적 통합일 것이다. 그 중에서 시민 생활을 위한 공동 경험과 자유 민주적 생활양식을 익히는 것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북한 여성은 집단적 동일시에 능한 반면에, 자기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는 데에는 취약성을 지니고 있다. 남한 여성의 경우 상황의 판단 능력과 개인적 이익 추구에 능하다. 이렇게 볼 때, 북한 여성에게는 자신의 이익을 합리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의사 결정 능력이 필요하고 남한 여성에게는 공동체적 정체성이 필요하다.

남북한 여성의 통일에 대한 인식은 민주 사민 의식과 관련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우리 민족의 통일이 민주 사회를 목표로 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통일 시대의 여성들은 통일에 대한 열린 마음과 인내하는 마음을 지녀야 한다.

통일에 대한 열린 마음을 지니기 위해서는 통일의 과정에서나 결과에서 유연성과 선택에서의 합리성을 존중해야 하며 통일 과정에서 실행 가능한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을 판단하는 능력과 자세를 갖추어야 한다.

통일에 대한 인내하는 마음은, 통일이 장기적으로 민족의 복지에 크게 기여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많은 희생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사회간접자본 투자, 실업수당 등 사회보장비 지출, 교육제도 등의 각종 제도 통합 비용 등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출에 따른 부담(세금)과 같은 경제적 부담 이외에도 가치 갈등에 따른 고통, 정신적 대립 등의 정신적 부담도 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교육부, 「오늘의 북한」. 1991.

극동문제연구소, 「북한전서(상)」. 서울:극동문제연구소, 1984.

김일성, 〈프로레타리아 국제주의 기치에 더욱 충직하자〉「김일성선집2」. 1954.

김일성, 「조선민주주의공화국에서의 사회주의 건설과 남조선 혁명에 대하여」. 평양:조선로동당출판사, 1965.

김일성 외, "1991년도 신년사", 로동신문 1991.1.1.

김학준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서울:박영사, 1984.

내외통신, 종합판(47), 1993.1.1-3.31

변진홍, 「평양에 부는 바람」. 서울:사람과 사람, 1993.

사회과학출판사, "주체사상의 철학적 원리", 「위대한 주체총서1」.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5.

서울대 사회과학 연구소, 「한국사회의 변동과 발전」. 서울:법무사. 1985.

손봉숙, 「북한의 여성:그 삶의 현장」. 1993.

손봉숙 외, 「북한의 여성 생활」. 서울:나남, 1991.

양호민 외, 「남과 북 어떻게 하나가 되나?」. 서울:나남, 1992.

엄단웅, 「령마루」. 평양:문예출판사, 1980.

원윤섭, "사회주의적 애국주의 교양을 심화시키기 위하여," 「근로자」. 제2호, 1970.
윤미량, 「북한의 여성 정책」. 서울:한울, 1991.
이승희, "한국인의 정치적 태도와 행태의 성차 연구",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1993.
이온죽, 「북한사회연구」. 서울:서울대 출판부, 1988.
———, 「북한사회의 체제와 생활」. 서울:법문사, 1993.
이태영, 「북한 여성」. 서울:실천 문학사, 1988.
이한 위음, 「북한의 통일정책 변천사(하)」. 서울:온누리, 1988.
이효재, 「한국의 여성운동」. 서울:정우사, 1989.
최상순, 「나의 교단」. 평양:문예출판사, 1982.
통일연수원, 「북한이해」. 서울:통일연수원, 1994.
————, 「통일문제이해」. 서울:통일연수원, 1994.
통일원, 「통일교육의 기본 방향」. 서울:통일원, 1994.
———, 「통일문제연구」. 제5권 3호. 4호
한국교육개발원, 「통일에 대비한 교육정책 연구Ⅱ」. 1993.
한국여성개발원, 「여성과 리더쉽」. 서울:한국여성개발원, 1992.
————————, 「우리여성」. 서울:한국여성개발원, 1991.
한국여성연구회, 「여성학 강의」. 서울:동녘, 1994.
한국여성정치연구소, 「북한의 여성생활」. 서울:나남, 1991.
한국청소년개발원, 「한국청소년연구」. 서울:청소년개발원, 1994봄호.

한석봉, 심형일, 「자주시대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3」. 평양:사회과학출판사, 1988.
허문길, 「대학시절」. 평양:금성출판사, 1990.
황병선 외, 「기자들이 가 본 북한」. 서울:다나, 1993.